

1. 총평

2019년 서울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는 기출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일부 시행시기를 묻는 지문(6번 문제 ④번 지문, 13번 문제 ①번 지문)이 있으나, 알파행정학 기본서나 핵심체크에서 모두 설명한 내용이고, 다른 지문과 비교할 경우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묻는 문제가 많았으며, 사례 문제(19번)도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며, 법령 문제도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95점 이상이라면 우수, 85점에서 90점까지는 보통, 80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 교재 영역별 | | 문제유형별 | |
|--------|---|-------|----|
| 기초이론 | 3 | 개념문제 | 2 |
| 정책학 | 1 | 이론문제 | 13 |
| 조직이론 | 7 | 법령문제 | 3 |
| 인사행정론 | 3 | 학자문제 | 2 |
| 재무행정론 | 1 | 사례문제 | 1 |
| 지방자치론 | 3 | | |
| 행정환류론 | 2 | | |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조직이론 출제빈도가 매우 높고, 정책학이나 재무행정론은 출제빈도가 낮다. 그런데 같은 날(6월 15일) 시험 본 지방직 9급 시험문제의 경우 정책학 6문제, 조직이론 1문제 출제되었다.

따라서 항상 출제빈도를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지만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이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개념, 이론, 학자, 사례에 해당하는 문제가 열다섯 문제이고, 법령 문제가 다섯 문제로 이론과 법령 문제가 평균적인 출제빈도로 출제되었다.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4. 문제의 난이도 분석

| | |
|----|---|
| 중상 | 2. |
| 중 | 3, 6, 10, 13, 15, 17, 20. |
| 중하 | 1, 4, 5, 7, 8, 9, 11, 12, 14, 16, 18, 19. |

5. 당부 사항

1) 2019년 서울시 행정학개론 20문제 모두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외에 암기를 병행해야 한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45-247. 핵심체크, pp.97-98.

4.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 9급(2019.6)

- ①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 ② 실체설은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 ③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조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 ④ 실체설은 사회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해설] ①(틀림) ①은 실체설에 대한 설명이다.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조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 구 분 | 실체설(적극설) | 과정설(소극설) |
|-----|---|--|
| 특 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선험적·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한다(도덕적 선 또는 자연법). ㉡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 ㉢ 전체주의, 권위주의, 엘리트주의, 합리모형, 개발도상국, 관료의 적극적 역할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은 수많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 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의 산물이다(내용 기준 없음). ㉡ 개인주의, 민주주의, 다원주의, 점증모형,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역할 강조 |
| 학 자 | Held, Rawls | Bentham, Bentley, Lindblom |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194-195. 핵심체크, pp.74-75.

5. 합리성의 제약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 9급(2019.6)

- ①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선호
- ② 감정적 요소
- ③ 비용의 과다
- ④ 지식 및 정보의 불완전성

[해설] ①(틀림) 다수 간의 가치 갈등이 있을 때 합리성이 제약된다.

| |
|--|
| <p><합리성 제약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의 복잡성 및 목표의 모호성 :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복잡성이 높고, 추구해야 할 목표가 모호한 경우 합리성이 저해된다. (2) 가치선호의 갈등 :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고, 새로운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기존의 가치체계와 충돌할 때 합리성이 저해된다. (3) 심리적 제약 : 인간의 주관적·감정적 요인, 관습·타성·현상유지 성향, 그리고 권위에 의존하여 행동하는 것은 합리성을 저해한다. (4) 인지적 한계 : 인간의 인지적 한계로 인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성이 저해된다. (5) 시간과 비용상의 제약 :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적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제약되어 있을 때 합리성은 저해된다. (6) 관료제 조직의 제약 : 관료제 조직의 경직성, 의사전달의 제약, 계서제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제, 선례답습적 행태 등은 합리성을 저해한다. (7) 조직 내외의 불확실성 및 비합리적인 외적 간섭 : 조직 내외의 여건 변화는 불확실성을 높여 합리성을 저해하며, 기득권자의 저항, 부당한 정치적 압력 등은 합리성을 저해한다. (8) 기타 : 정책결정구조의 왜곡, 다원주의체제 하에서의 대인 간의 조작이나 이합집산 등은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
|--|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216. 핵심체크, pp.83-84, 113.

6.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 9급(2019.6)

- ① 신공공관리론(NPM)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성과중심 정부 실현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③ 책임운영기관은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유형으로 구분된다.
-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해설] ④(틀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1999년 1월(김대중 정부)에서 제정되었다.

- ①(옳음) 책임운영기관은 영국의 1988년 정부개혁 프로그램인 Next Steps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신공공관리론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제도이다.
- ②(옳음)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 ③(옳음) 책임운영기관은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유형으로 구분된다.

<책임운영기관의 사무 성격에 따른 구분>

- ①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등
- ②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 국립국제교육원, 통일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 ③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 ④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병원 등
- ⑤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 ⑥ 기타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 특허청, 국제상담센터 등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35-437. 핵심체크, pp.190-192.

7.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 9급(2019.6)

- ①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 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② 의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 ③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 ④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해설] ③(틀림) 현대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현대 행정국가에서 외부통제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①(옳음) 행정책임이란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요망에 부응하여 공익·직업윤리·법령과 행정목표·정책이나 사업계획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최근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 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②(옳음) 입법부는 입법심의, 공공정책의 결정, 예산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 임명동의권·해임건의권·탄핵소추권, 기구개혁, 청원제도 등의 기능을 통해 국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 ④(옳음) 선거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선거는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포괄적이며 간접적인 통제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895-901. 핵심체크, pp.417-420.

8.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선거구의 조정 등 헌법상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울시 9급(2019.6)

- ① 구성정책
- ② 배분정책
- ③ 규제정책
- ④ 재분배정책

[해설] ①(옳음)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에 관련된 정책으로서,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이며,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는 정책이다. (예) 선거구의 조정, 정부기구의 개편, 공무원 보수와 연금 등에 관한 정책 등

| 구 분 | | 강제성 적용 영역 | |
|------------|-----|--|----------------------------------|
| | | 개별적 행위 | 행위의 환경(모든 행위) |
| 강제의 가능성 | 간접적 | 배분정책 : 국유지 불하 정책, 보조금 | 구성정책 : 선거구 조정, 기관 신설, 공무원 보수와 연금 |
| | 직접적 | 규제정책 : 기준 이하 상품 규제, 불공정 경쟁 규제, 사기광고 규제 | 재분배정책 :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 |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29-230. 핵심체크, pp.89-90.

9. 행정통제의 유형 중 공식적·내부통제 유형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울시 9급(2019.6)

- ① 정당에 의한 통제
- ② 감사원에 의한 통제
-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
- ④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해설] ②(옳음)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내부통제에 속한다.

- ①(틀림) 정당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외부통제에 속한다.
- ③(틀림)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외부통제에 속한다.
- ④(틀림)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내부통제에 속한다.

<통제 주체에 따른 분류 : 내부통제와 외부통제(Gilbert의 분류)>

| 구 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
| 공 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수반(대통령) 및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 계층제(상관)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 ● 교차기능조직(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의한 통제 ● 정부업무평가(구 심사평가)에 의한 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부에 의한 통제 ● 사법부(헌법재판소, 법원)에 의한 통제 ●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
| 비공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에 의한 통제 ● 동료 집단의 평가와 비판에 의한 통제 ● 대표관료제 ● 공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중통제 ● 시민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 여론, 매스컴, 인터넷 등에 의한 통제 ● 정당에 의한 통제 |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896. 핵심체크, p.418.

10.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Maturity)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부하가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간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서울시 9급(2019.6)

(가) 참여형 (나) 설득형 (다) 위임형 (라) 지시형

- ① (다)→(가)→(나)→(라)
- ② (라)→(가)→(나)→(다)
- ③ (라)→(나)→(가)→(다)
- ④ (라)→(나)→(다)→(가)

[해설] ③(옳음)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리더십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 국민의 성숙도 | 매우 낮음 | 낮 음 | 높 음 | 매우 높음 |
|----------|---------------------|-----------------|-----------------------|--------------------|
| 정부 운영 방식 | 권위 (지시, telling) | 설득 (selling) | 참여 (participating) | 위임 (delegating) |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466. 핵심체크, p.207.

11. 조직의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울시 9급(2019.6)

- ①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기준이 낮아진다.
- ②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 내 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해진다.
- ③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 ④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이 낮아진다.

[해설] ③(옳음)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분화)z, 공식성(표준화에 의한 조정), 분권성이 높아진다.

- ①(틀림)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의 수준은 높아진다.
- ②(틀림) 규모가 클수록 집단의 응집성은 약해지고, 조직 구성원의 스트레스가 커진다.
- ④(틀림)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은 높아진다.

<상황변수와 구조변수의 관계>

| 구 분 | 복잡성 | 공식성 | 집권성 | 통솔 범위 |
|-------------------|--------------|-----|------------------|-------|
| 환경이 확실(단순, 안정)할 때 | 단순(반대 견해 있음) | 공식 | 집권 | |
| 규모가 클 때 | 복잡 | 공식 | 분권 | |
| 기술이 일상적일 때 | 단순(반대 견해 있음) | 공식 | 상관성 약(Daft : 집권) | 넓음. |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99, 402. 핵심체크, pp.171-172.

1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 9급(2019.6)

- ①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 ②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간다.
- ③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재정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해설] ②(틀림)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자주재원+의존재원)에서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다.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낮추게 된다.

- ①(옳음)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자주재원+의존재원)에서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③(옳음) 지방재정자립도는 비율지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규모나 재정력을 알려주지 못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 ④(옳음) 재정자립도는 총세입에서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재정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867. 핵심체크, pp.402-403.

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울시 9급(2019.6)

- ①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 ②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아닌 자신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없다.
- ④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해설] ②(옳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②번 지문 중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민투표법 규정에 비추어볼 때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본다.

<주민투표법>
 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②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①(틀림)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는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었으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시행(2004.1. 제정, 2004.7. 시행)됨에 따라 현재 까지 실시되고 있다.

③(틀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틀림)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 ①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②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91-792. 핵심체크, pp.366-367,371.

14. 네트워크 조직구조가 가지는 일반적인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 9급(2019.6)

- ①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 ② 통합과 학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④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해설] ④(틀림) 네트워크조직은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 중심 조직은 전략·계획·통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대부분의 생산 기능은 다른 조직에 위임한다. 따라서 네트워크조직은 느슨하게 연결된 결합된 조직이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 형성이 곤란하고,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①(옳음)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②(옳음) 네트워크 조직의 구성원들은 암묵적 지식, 기술적 혁신과 같은 유형(형태)의 자산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학습과 정보 확산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아이디어가 빠르게 실행에 옮겨지도록 한다.

③(옳음)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18-420. 핵심체크, p.182.

15. 조직 내에서 구성원 A는 구성원 B와 동일한 정도로 일을 하였음에도 구성원 B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애덤스(J. Stacy Adams)의 공정성이론에 의거하여 취할 수 있는 구성원 A의 행동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 9급(2019.6)

- ① 자신의 투입을 변화시킨다.
- ②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각을 변경한다.
- ③ 이직을 한다.
- ④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의 실제량을 자신의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보상의 재산정을 요구한다.

[해설] ④(틀림) 애덤스(J. Stacy Adams)의 공정성이론 처우의 공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신념이 직무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이다. 처우의 공정성은 자신의 투입·산출을 준거인의 투입·산출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 이론에 따라 경우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는 (1) 투입 또는 산출을 변화시켜 조정하는 것, (2) 투입과 산출에 대한 본인의 지각을 바꾸는 것, (3) 준거인물을 바꾸는 것 (4) 현장 이탈(직장 이동) 등이 있다.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은 투입과 산출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연구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옳음) ①은 불형평성을 지각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투입 또는 산출을 변화시켜 조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②(옳음) ②는 불형평성을 지각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투입과 산출에 대한 본인의 지각을 바꾸는 것에 해당한다.

③(옳음)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투입 또는 산출을 변화시켜 조정하는 것, 투입과 산출에 대한 본인의 지각을 바꾸는 것, 준거인물을 바꾸는 것)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형평성을 계속 느끼는 경우, A는 조직을 떠나거나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48-449. 핵심체크, p.200.

20. 지방자치의 이념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울시 9급(2019.6)

- ①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래권으로, 단체자치는 고유권으로 본다.
- ②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한다.
- ③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대립시키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의결기관이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통합형을 채택한다.
- ④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해설] ④(옳음)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 하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 자치사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위임사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체자치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 자치사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통일선기관으로서 위임사무로 처리한다. 따라서 단체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한다.

- ①(틀림)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고유권으로, 단체자치는 전래권으로 본다.
- ②(틀림)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강조한다.
- ③(틀림) 주민자치는 일반적으로 의결기관이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고, 단체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대립시키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한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 구분 | 주민자치 | 단체자치 |
|------------|--------------------------------------|-----------------------------------|
| 의미 및 이념 | 정치적 의미, 민주주의의 원리 | 법률적 의미, 지방분권의 원리 |
| 범위 | 광범위함. | 협소함. |
| 국가 | 영국, 미국 |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
| 자치권의 인식 | 자연적·천부적 권리(고유권설) |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 |
| 자치의 중점 |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 (주민에 의한 행정) | 중앙과 지방의 관계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
| 중앙과 지방의 관계 | 수평적·경쟁적·협력적 관계 | 수직적·권력적 감독관계 |
| 자치단체의 성격 | 단일적 성격(자치단체) | 이중적 성격(자치단체+일선기관) |
| 사무의 구분 | 고유사무(위임사무 없음)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없음) |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병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
| 권한 부여 방식 | 개별적 수권(지정)주의 | 포괄적 수권(예시)주의 |
| 중앙통제 | 약함(입법적·사법적 통제). | 엄함(행정적 통제). |
| 위법행위 통제 | 사법재판소 | 행정재판소 |
| 조세제도 |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 주체) | 부가세(국가가 과세 주체) |
| 민주주의와의 관계 | 상관관계 인정 | 부정 |
| 지방정부 형태 |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식) | 기관대립형(대통령제식) |
| 우리나라 특성 | ①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모호 ③ 독립세주의 | ②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 ④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대립형 |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768. 핵심체크, p.356.